

7월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하반기 돌입

경제산업건설위원장 누가 뛰나?

농산업경제위서 명칭 변경... 김대중 의원 단독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농산업경제위원회는 하반기부터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한다.

관장기관은 기업유치 지원실, 미래산업국, 새만금 해양수산국, 건설교통국, 수산기술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애코융합산업연구원, 전북개발공사이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하반기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의원은 김대중(익산1선거구) 의원이다.

김대중 의원은 지역구가 익산시 모현동, 송학동, 평화동, 인화동, 중앙동, 마동으로 주로 익산 구도



김대중 의원

심 지역이다. 무엇보다 학교가 살아야 2세 교육은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마인드를 가진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올해 원광대 개교 78주년 기념식에서 박성태 원광대 총장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제5대와 6대 익산시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후 10대와 12대 도의원 선거에 당선되는 특성을 발휘했다.

그만큼 지역 내에서 신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역구가 구도심이 대부분이고 익산역 앞과 뒤를 관통하는 서민 밀집 지역이기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손길을 주어야만 하는 지역이다.

김대중 의원은 성실하고 신의있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에서 힘있는 노관영 도지사 취임 이후 기업유치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에 지역민들에게 신뢰할만한 도의원으로 정평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회경제 위원장과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할 정도로 당에 대한 헌신도가 돋보이고, 매사에 무슨 일을 맡아도 열정적으로 임하며,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일을 처리한다는 평가다.

/이만호 기자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정착 지원 거점기관인 '전북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과정을 돕기 위해 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전북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현장 청취

이정식 고용부 장관·김관영 도지사, 외국인 근로자들과 간담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과정을 돕기 위해 현장을 찾아 나섰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과 김관영 도지사는 26일 오후 1시 전북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정착 지원 거점기관인 '전북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지원센터 운영 상황을 전방을 살폈다.

이번 이정식 장관의 방문은 전북지역에 처음으로 개소한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살피며, 주말을 이용해 한국어 교육 등을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장관은 먼저 한국어 교육에 참가하면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는 물론 외국어 상담원 등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간담회를 갖고 이용 소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지원 사업' 공모에 올해 초 선정,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일 전주 상공회의소 6층에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전북은행, 변호사·노무사·행정사 협회, 전북경찰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일상생활 및 전문상담 △직장생활 적응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 △한국어 교육 △초기 유입자를 위한 전북사랑캠 키트 제공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만호 기자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총 14건 안건 의결

익산시의회(의장 최중오)가 24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과 또한 지원금 지급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강경숙 의원)을 채택했다.

한동연 부의장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에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다"면서 "앞으로도 익산시의회는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제안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5분 자유발언에서 조규대 의원은 황금로 확포장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조은희 의원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전담부서 또는 조치 설치를 촉구했다.

장경호 의원은 익산시 청년들 '상상노리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했으며, 손진영 의원은 육아초등학교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제안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난 25일 서울역 인근 세종대로에서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 채 상병 사건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한다"

야당·시민사회 공동 범국민대회... "특검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채수근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의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역 인근에서 열렸다.

25일 서울역 인근에서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8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

당, 새진보연합 등 야당 등이 참여한 야당·시민사회 공동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가 개최됐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경찰, 국방부, 해병대수사단 등을 통해 사건에 개입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도록 위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로 점

점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대상자인 대통령의 말처럼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은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에 부처진 채상병 특검법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스

정읍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거부한다"

"진실 규명 기회 박탈하려는 것"

정읍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은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들은 24일 성명문을 통해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어김없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 규명의 기회를 박탈하려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다"며 "또한, 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행정부의 독단적인 권력 행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채 해병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고 수사 위압 의혹을 규명하려는 국민의 염려와 요구를 묵살한 처사이며, 이로 인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신산히 깨져 버렸다 할 것"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지난 24일 정읍시청 앞에서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거부를 외치고 있는 정읍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진=정읍시의회 제공)

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는 28일, 채 해병 사건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국회에서 다시 살아나길 다수의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여당은 국민을 삼키는 책임 있는 자세로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찬성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 2024

삶의 질 향상 조례제정 선진대상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장이 지난 23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 월드스타문화대상' 시상식에서 '2024삶의질향상조례제정선진대상'을 수상했다.

장정복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장수군의 회를 이끌면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을 제정하며 장수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부안 백산초 학생들, 체험 통해 의회 역할 등 이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2024년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다.

이번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부안 백산초등학교 4~6학년 20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방식과 함께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 발의', '토론', '투표'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발언 주제와 안건은 학교 내 게임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만호 기자

'文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의혹 제기 5년만에... 검찰, 홍남기·강경화 전 장관도 무혐의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5년여 만이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장관, 조현욱 전 인사수석 등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임 전 실장과 조 대표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여명은 지난 2017~2018년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8년 12월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게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무혐의 처분했다.

한 총리는 지난 2022년 6월 기자단 간담회에서 홍 전 원장에 대해 "소득 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후 홍 전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해 8월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외적·공공적 사퇴 압박으로 권한을 넘겼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스